‘조국 청문회’ 여야 총성 없는 전쟁

끝없는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오른쪽)과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與, 딸 생기부 공개 비난…바른미래 “국조·특검 추진”

한국당,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부각 압박 수위 높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5일 여야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조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씨가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여권 인사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한 것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여권을 압박한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공개한 것을 ‘인권유린 위법행위’라며 고강도로 비난했다.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초안 작성에 들어가면서 국조·특검 추진을 본격화하고 한국당도 공조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조 후보자 사수에 나선 여권과의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최근 조 후보자 딸의 고등학교 생기부 내용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조 후보자 딸 생기부 문제와 관련, “생기부는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없다”면서 “명백한 인권유린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같은 회의에서 “후보자와 그 가족을 향해 자행해 온 무차별적인 인신 테러와 아님말고식 거짓선동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청문회를 통해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이 해소되면서 조 후보자가 사법개혁 적임자임이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의조 의혹과 이와 관련해 김두관 의원이 해당 대학 총장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 확인 그 자체에 불과하다며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또 최성해 총장에 전화한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는 “당원이 아니다”면서 선 긋기를 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후보자 딸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여당과 조 후보자를 동시에 압박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총장에게 허위진술을 압박한 사실마저 드러났다. 정 교수를 당장 구속 수사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원들이 동양대 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박했다고 한다. 우리 당은 즉각 해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 청문회는 조 후보자의 위법, 위선 등을 총정리해서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여드리는 사퇴 선고 청문회”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동시에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을 ‘조국 게이트를 넘어선 문재인 정권 게이트’라고 주장하면서 “범죄자 비호를 포기하고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황교안 대표)라고 촉구했다.

이는 조 후보자의 낙마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특검 등을 통해 사퇴 투쟁에 나서기 위한 명분 쌓기로 분석된다. 전날 청문회 일정 협상 중단선언을 했던 바른미래당은 국조와 특검 추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는 어제부터 국조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면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순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진실 규명하는데 더 낫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등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합의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이낙연 총리 “검찰이 정치하겠다고 덤비면 안돼”

압수수색 비판 … 박상기 법무장관도 “보고 했어야”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5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공개 비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수사에 대해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리는 이어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가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대해서는 “그 검사의 글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과 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며 “나름의 판단이 있었겠지만 인사청문회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 시기나 방법, 강도 등이 적정했느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성적이 유출된 것과 대해 “검찰의 오래된 적폐 가운데는 피의사실 공표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명예훼손 등이 있다”며 “그런 일들이 이번에 재현되고 있다면 참으로 유감”이라고도 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해 총리가 그렇게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지적에 이 총리는 “제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법조계에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사후에 알게 됐다. (사전에) 보고를 했어야 했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압수수색) 보고를 (사전에) 하고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는 게 논리에 맞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조 후보자 딸의 고교 생활기록부(생기부)가 유출된 데 대해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를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

여권인사들 ‘동양대 표창장’ 경위 확인

유시민·김두관, 총장에 전화…“개인 친분 있어 질문한 것”

여권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 등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돼 5일 논란이 일고 있다.

유 이사장과 김 의원 모두 전날 최 총장에게 조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통화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 제 기억엔 어제 점심 때쯤이었던 것 같다”며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없다. 저도 ‘유튜브 언론인’이라 사실관계에 관한 취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 총장을 잘 안다. 예전에 저를 교수로 초빙한 적이 있지만 사양했고 동양대에 강연이나 교양강좌도 간 적이 있다”며 “그래서 동양대에서 나간 것이 총장상인지 표창인지, 기록이 남아있는지, 봉사활동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사실관계를 여쭤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오전 11시 전후 최 총장과 통화를 했다. (조 후보자 딸 관련 의혹) 경위를 묻는 차원이었다”며 “저는 경북전문대 졸업생이다. 동양대와 같은 재단이다. 경북 영주에서 (제가) 학교를 다녀 최 총장 부친이 은사라서 잘 안다”며 “1년에 한두 번 식사도 하고 가끔 통화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를 도와달라는 취지의 전화였느냐’는 질문에는 “결벽증이 있어 그런 것은 못 하는 편”이라고 부인했다. /연합뉴스

靑 “신남방 외교 확고한 기반 마련”

문 대통령 아세안 10개국 순방 완료…오늘 귀국

청와대는 1일부터 시작된 문재인 대통령의 동남아 3국 순방과 관련, “4강(미·중·일·러) 외교에 버금가는 신남방 외교를 펼치기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1~3일 태국 공식방문, 3~5일 미얀마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했으며, 5일부터 1박2일간 라오스 국빈방문을 마친 뒤 6일 귀국할 예정이다.

주형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5일 오후(현지시간)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 순방을 조기에 완료하게 됐다”며 이런 평가를 내놨다.

주 보좌관은 이번 순방의 가장 큰 성과로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견인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주 보좌관은 “아세안에서 1,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도 아세안 측에서 먼저 제기했을 정도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관심과 지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체결해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평화당, 소상공인 신당과 연대 선언

총선 전 재기 모색…소상공인연합 “다음달까지 창당 완료”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소상공인이 중심이 된 민생정치 실천을 위해 다음 달 ‘소상공인 국민행동’(가칭)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연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의 정치적 독립을 이루겠다는 열망 아래 ‘소상공인 국민행동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 7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소상공인의 모든 정치 관여를 금지한 정관 5조를 삭제하는 연합회 안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연합회는 간담회 이후 배포한 자료에서 내달 말까지 1만명의 창당발기인을 모아 창당을 완료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평화당은 당 활동의 중심을 소상공인에 놓고, 연합회와 정치 연대체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당 강령 핵심 조항에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 “잠자는 소상공인기본법을 흔들어 깨워 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임야
바로 삽니다, 맹지 사절
문의. 010-6834-7400

지난 20년간 13,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강의
(컨설팅과 재테크)
전임강사 : 정 영 수 경영학박사
(부동산 전공)

● 평생교육공로 교육과학부장관상 수상
● MBC – TV 방송국 경제특강
● KBC – 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강의
● 전남대 20년 강의(전대 용봉인상 수상)
● 공무연수원, 중소기업청, 한국전력 등 150여회 이상 특강
특 전
자격 취득 희망시, 공인부동산빌딩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권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하여 평생지도하여 드림
▶강의일정 | 2019년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19:00~21:00
▶강 의 료 | 210,000원(15주) * 선착순 50명
▶조선대 평생교육원
전화 062)230-7700-2(010-5613-180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